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과 장 박호형 서기관 김준경	042-481-5168 042-481-8182
	2017년 11월 1일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바랍니다.		

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

- 특허청, '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' 발표 -

< 핵심 내용 >

① 고품질 강한 특허를 위한 '특허창출 패러다임 전환'

- 특허무효 시 기납부한 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(책임행정 구현)
- 특허품질 제고 노력이 심사단계, 심사관 중심 → R&D, 출원, 심사 등
 전 단계에서 산·학·연·관 모든 주체의 입체적 참여
- 4차 산업혁명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및 특허등록료 감면
- 공정·신속한 특허심판(외부 전문심리위원회제도 도입, 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등)

② 중소·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'제도 혁신'

- 특허·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도입
- 중소·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
- K-브랜드 보호 및 수출기업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강화

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'정부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'

- 정부 발주 조사사업(특허·상표·디자인)의 민간 참여를 50% 이상으로 확대
- 특허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적극 육성
- 지식재산 금융(1조)·거래(3천억) 활성화 및 세제개선(출원·등록비용 세액공제 등)

④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'지식재산 생태계 조성'

- AI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선제적 정비
- 발명 인재의 성장 지원 및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 환경 조성

[수립배경]

-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11월 1일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으로서 '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'을 발표했다.
-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'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'을 창출하고, 이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호하며,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'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'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.
- 특히,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 정책 전반의 큰 틀을 다시 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.
- 특허청은 지난 7월 27일 성윤모 청장 부임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, 산업계·학계·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번 정책을 마련하였다.

[기본방향]

□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‘품질 중심의 책임 행정’, ‘중소·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제도 혁신’, ‘정부사업의 민간 개방’, ‘미래 대비 IP 생태계 조성’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되었다.

○ 구체적으로 보면, ‘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’를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, 14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.

【 4대 전략 및 14대 중점과제 】

◆ 비전 :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

4대 전략	14대 중점과제
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	①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
	②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
	③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
	④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심판
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	① 중소·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
	②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
	③ 경제·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
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	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
	② 중소·벤처기업 IP 역량강화 및 IP 기반 창업 지원
	③ 지식재산 금융·거래 활성화
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	① 4차 산업혁명 대비 법·제도 개선
	② 미래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
	③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
	④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

[중점 추진과제]

1.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

① 특허심사 품질을 혁신하고, 특허가 무효되면 등록료를 전액 반환하겠습니다.

- 특허심사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적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의 획기적인 제고를 추진

*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('16) : (한) 11.0, (미) 26.0, (일) 17.4, (유럽) 34.5, (중) 29.4
→ '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, 이를 위해 '22년까지 심사인력 1천명 증원 추진

- 또한, 특허무효 시 기납부한 특허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

* (현행)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다음해부터의 특허등록료를 반환

- 심사 품질 제고 노력과 더불어, 무효심결예고제를 시행('20)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'16년 49.1% 수준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'22년까지 33%로 개선 추진

* 무효심결예고제 : 심판관이 무효심결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사전에 이를 예고하고 특허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

②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원천·핵심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, '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습니다.

-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·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*을 확대('18)

* (현행) 1~3년차 70%, 4~9년차 30% 감면 → (개선) 1~3년차 70%, 4~20년차 50% 감면

-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정부 및 민간 R&D의 원천·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지원

* ('18) 5개 분야 25개 유망기술 → ('22, 누적) 25개 분야 125개 유망기술

- 만성적인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지식재산 수출입 내역의 조사·분석자료를 과기정통부,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IP 무역수지 개선 대책 마련에 활용('18)

*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IP 수출입에 관한 외환거래 정보 입수·분석이 가능해짐('17.3)

③ 돈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, 특허창출 과정 전반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.

- 기존의 '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하는 활동'으로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&D·출원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, 산·학·연·관 모든 주체의 역량 강화 추진

【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단계별/대상별 주요과제】

구 분	단계별 지원			
	R&D	출 원	심사 이전	심 사
대상별 주요과제	정부 ◦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기업 ◦ 업종별 특허동향 분석 ◦ 중소기업 IP-R&D 대학·공공연 ◦ 기업 주문형 IP-R&D	특허업계 ◦ 자율관리 환경 조성 기업 ◦ 특허심사동향 분석 ◦ IP 전문투자 펀드 대학·공공연 ◦ 특허관리체계 개선 ◦ 특허 설계 지원	기업 ◦ 중소·벤처기업 대상 선행기술조사 결과 사전 제공	특허청 ◦ 심사인력 증원 ◦ 협력심사 확대 ◦ 선행기술조사 내실화
특허품질	발명품질	출원품질		심사품질

- (정부) 18대 산업분야별로 특허를 분석하여 미래 유망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DB의 고도화(~'22)

* 미래 신기술의 융복합 특성을 반영하도록 기술분류체계 재정비 및 중국 특허 DB 구축

- (기업)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-R&D 연계 전략(IP-R&D¹⁾) 수립 지원 확대

* 중소기업 IP-R&D 전략 지원 과제(건) : ('16) 203 → ('22, 누적) 3,500

- (대학·공공연) R&D와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연계시켜 우수특허를 창출하는 기업 주문형 IP-R&D 전략 지원 강화

* 기업 주문형 IP-R&D 전략 지원 과제(건) : ('17) 23 → ('22) 60

- (특허업계) 자율적인 품질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원품질 수준에 따른 심사업무량에 비례한 차등적 심사 수수료 정책 도입('19~)

* 명세서 작성이 우수하여 심사업무량을 경감시켜주는 출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

1) 핵심특허 및 공백기술 등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재산 기반 R&D 전략 지원 사업

- 기존에 심사단계에서 심사관만 활용하던 특허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청구시 출원인에게 제공하여, 심사선택권(출원서 보정, 출원 취하 후 재출원 등) 부여

* 중소·벤처기업 대상으로 심사착수 전 선행기술조사 결과 사전 제공('18~)

④ 특허심판의 공정성·전문성·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(공정성) 특허청 출신 변리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심판관의 회피기준 등을 규정한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·시행('17)하고, 국선 대리인, 심판구조 제도*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
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소기업 등에 대해 심판수수료, 대리인 비용 지원

- (전문성) 외부 전문가가 특허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및 첨단기술 분야 심판에서 심판관을 보좌하는 심판연구관 제도 도입('18)

- (신속성)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이 장기간의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, 심판단계에서의 증거 제출시기를 제한하고, 심판을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하여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(~'19)

2.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

① 중소·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악의적인 특허·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배상 제도(3배 이내)를 도입하고, 처벌가능한 영업비밀 침해유형을 확대('18)
- 하도급, 사업제안 등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·사용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('18)하는 등 중소·벤처기업의 아이디어·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

-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, 상표권 침해만 관장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 범위를 디자인 도용·침해 행위* 수사까지 확대 추진(~'18)

*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형태모방행위,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침해 행위

②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겠습니다.

-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K-브랜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센터(IP-DESK)를 추가 설치하고,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(('18) 26건 → ('22) 100건)을 제공

* IP-DESK : ('17) 중국, 미국 등 8개국·14개소 → ('22) 싱가포르 등 16개국·22개소

- 세계 5대 특허청(IP5)간 협력을 강화하고,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형 특허 행정서비스를 확산하여 수출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

* IP5간 특허 공동심사²⁾ 등 지식재산 제도의 표준화 추진

* UAE와의 서비스 수출(450만불, '16)에 이어 시스템 유지보수 및 IP 종합 컨설팅 계약(126만불)을 추진하고 성공 모델 글로벌 확산('18~)

③ 비수도권, 여성 등에 대한 경제·사회적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-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IP 관련 상담·교육을 실시하고 IP 경영지원단이 방문하여 지역 중소·벤처기업의 IP 애로를 해결하며,

* 비수도권 특허출원 : ('05) 20.7% → ('09) 32.7% → ('16) 37.6% → ('22) 39.2%

- 경력단절여성의 지식재산 분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광역거점별 '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(가칭)' 신설 등 여성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

* 지식재산권 출원 중 여성 비율 : ('16) 23.7% → ('22) 30%

- 중소·벤처기업, 학생 등의 지식재산 심판·소송시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를 확대(('17) 120건 → ('22) 300건)

2)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,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결과의 정확성·일관성을 높이는 제도로 '15.9월부터 미국과 시행 중

3.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

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5년간 1.2만개 ('18~22)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

-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·상표·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% 이상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관리·평가·교육에 집중토록 개선하며,
 - * 특허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의 민간 점유율 : ('17) 25% → ('22) 50% 이상
-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, IP 투자펀드 등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('18년 7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 예정) 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육성을 적극 지원
 - * 특허관리전문회사(NPE)형 IP 투자펀드 조성 확대 : ('17) 11개 → ('22) 20개
- 또한,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
 - * 중소기업 특허 출원·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,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 등

② 중소·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및 IP 기반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.
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·완화하고,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('19)하고
 - * 가입 기업은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해외출원, 국내외 심판·소송 등의 사유 발생시 비용을 선대여 받아 일정기간 분할 상환
-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신규 시행(('18) 100 → ('22) 500건)하며,
- 예비창업자 아이디어의 지재권화(5년간 1만건)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(5년간 5,500건) 지원 확대

③ IP 금융·거래 활성화로 지식재산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기존의 지식재산 보증·담보대출 중심에서, 창업기업·스타트업이 미래가치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IP 금융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'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,

* IP 금융 규모 : ('17) 3,500억원 → ('19) 6,500억원 → ('22) 1조원

- IP 수요자·공급자·투자자·중개자간 지식재산 활용네트워크를 가상 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으로 강화하고, 대학·공공연의 우수 특허 거래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2천억원에서 '22년까지 3천억원으로 확대

* IP-PLUG 기술분야 : ('17) 8개 → ('18) AI, IoT, VR 등 10개 → ('22) 16개

4.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

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·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디지털·네트워크 환경에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유통도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('18),

* (현행) 타인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SW를 기록매체(CD 등)에 저장해 유통하면 특허침해이나, 동일한 SW의 온라인 유통(전송)은 침해인지 불명확

- AI·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·제도를 정비(~'20)

*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AI에 의한 발명, 3D 프린팅파일의 보호, 창작성 없는 데이터의 보호·활용 등에 관해 논의하는 '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' 출범('17. 7)

② AI,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특허행정을 효율화하겠습니다.

-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5개년 전략을 수립하고('18),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특허 DB를 시범 구축하는 등 특허 빅데이터 축적의 기반을 조성('17~19)

③ 발명 인재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.

- 199개 발명교육센터의 창의·융합형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 ‘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’를 설치(~'22)하는 등, 청소년 발명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

* 청소년의 발명체험 교육 비율 : ('16) 5.7% → ('22) 30%로 확대

- ‘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’을 확대하고,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지속적인 확산 및 운영과목 확대

*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수 : ('17) 17개 → ('20) 35개 → ('22) 50개

④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직무발명 보상대상을 식물신품종 연구 등으로 확대하고,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등 세제개선*을 추진하여 R&D 종사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확산

*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: ('16) 60.2% → ('22) 75%

*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(현행 연 300만원) 인상을 추진

- 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손쉽게 발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나도 발명가’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('18)하고, 발명의 날 유공자 선정을 발명인 중심으로 개편('18)하는 등 발명 친화적 환경 조성

[기대효과]

- '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'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,
 - 지식재산 집약산업³⁾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12.6조, 5년간 총 63조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,
 -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규모는 2.1조원('17)에서 2.7조원('22)으로 5년간 6천억원 증가하여(총 27.4%, 연평균 5%)
 - 이를 통해 1.2만명('18~'22)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되며
 -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효율성 증가,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'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(지식재산 무역수지 : ('16) △19.1억\$)

[향후 추진계획]

- 여기에 담긴 핵심적인 사항들은
 - 산업부, 과기정통부,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부처·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,
 -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중소·벤처기업을 비롯한 산·학·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임
 - 성윤모 특허청장은 “영국,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이고,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 될 것”이라 하면서, “앞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고 강조함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김준경(☎ 042-481-8182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3) 지식재산권의 집중적 투입을 통해 경제적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, 전체 GDP에서 IP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38.2%('14), 유럽 42.3%('11~'13)이며 우리나라는 37.2% 수준('15)

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

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

- ①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
- ②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
- ③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
- ④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심판

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

- ① 중소·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
- ②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
- ③ 경제·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

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

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

-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법·제도 개선
- ② 미래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
- ③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
- ④ 발명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

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

- 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
- ② 중소·벤처기업 IP 역량 강화 및 IP 기반 창업 지원
- ③ 지식재산 금융·거래 활성화

참고 2

추진전략 및 주요 목표

추진전략	주요 목표
강한 지식재산 창출 (혁신성장)	• 특허무효율 개선 : ('16) 49.1% → ('22) 33% • 특허무효시 등록료 전액 반환('19) •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심사 및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핵심특허 선점 지원('18) • 중소·벤처기업 특허-R&D연계 전략 지원 : ('16) 203건 → ('22, 누적) 3,500건
지식재산 보호 강화 (공정경제)	• 특허 침해시 징벌배상제도(최대 3배) 도입('18, 특허법 개정) •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('18, 부경법 개정) • 중소·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: ('16) 636건 → ('22) 2,200건 • 국제 지식재산 보호 순위(IMD) : ('17) 44위 → ('22) 20위
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(일자리경제)	• 정부 발주 조사사업 민간 점유율 : ('17) 25% → ('22) 50% → '22년까지 1.2만개의 일자리 창출 •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규모 : ('16) 5,500억원 → ('22) 1.3조원 • 특허공제제도 도입('19) 및 IP 세제 개선(출원·등록 비용 세액공제)
지식재산 기반 마련	•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법·제도 개선('19) • 초·중·고생의 발명교육 참여율 : ('16) 5.7% → ('22) 30% •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: ('16) 60.2% → ('22) 75%
기대 효과	•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로 5년간 총 6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('18~'22) •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규모 5년간 6천억원 증가(2.1조 → 2.7조) • '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 ('16) △2.6조원 → ('22) +0.4조원 (저작권 제외)